

한국과 미국의 집권정당 정책과 층별 소득분포에 대한 小考

김 종 권*

Abstract

미국 센서스 뷰로 데이터에 의하여 2차대전 후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실질 세전 소득증가율의 차이를 살펴볼 때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에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이 시정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동안에는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저소득계층보다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다. 소득계층에서 하위 20%의 계층은 공화당정부의 기간동안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의 기간에 4배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가졌다. 이는 양 정부별 실업률 차이에서 비롯되는 데 민주당정부의 기간 동안에 평균 30% 낮았으며 GDP성장률은 평균 30% 높았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부별 차이는 1980년대 이후 세후 소득증가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국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신정부에서는 이전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적절한 타이밍(timing)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1. 서론

과거 30년 동안 미국경제에서 경제적 불균형(economic inequality)이 커져 왔다. 이러한 불균형 증가의 규모는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 확대로 그대로 연결되어졌다. 예를 들어, 정규직 근로자들의 개인소득 분포에 대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1970년부터 2000년까지 0.326에서 0.406으로 25%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경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집권정당별로 통화정책과 근로자소득 관계에 대하여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 신홍대 경상정보계열 학과장

2. 기존문헌 연구

Blank and Blinder(1986), Cutler and Katz(1991), Levy and Murnane(1992), Hines, Hoynes, and Krueger(2001) 등의 연구에서는 미국 가계의 상위 5%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15.8%에서 21.5%로 1/3 이상 늘어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Levy and Murnane(1992)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경제 메카니즘에 의하여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교육수준이 높고 숙련된 근로자들이 고소득계층이 되고 교육수준이 낮고 비숙련 근로자들이 저소득계층으로 고착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경제정책 상이점과 관련된 연구로는 Hibbs(1977, 1987), Keech(1980), Beck(1982), Alesina and Sachs(1988) 등이 있다. 이들의 논문결과에서는 공통적으로 민주당정부는 실업율을 낮추는데 주로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둔 반면에 공화당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Alesina(1988), Alesina and Rosenthal(1989), Alesina, Londregan and Rosenthal(1993)은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경제성장 사이에 현격한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민주당정부에서는 집권 후 2년까지 경제가 팽창한 후 3년과 4년째에는 저성장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공화당정부에서는 집권 후 2년까지 경제가 저성장국면을 보이다가 3년과 4년째 들어 활황국면을 나타냈다.

이러한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의 소득분포에 대한 연구는 Hibbs(1987), Hibbs and Dennis(1988)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실질국내총생산과 통화공급, 실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Hibbs(1987)는 1948년부터 1978년까지 소득 하위 40%로 상위 20%의 세후소득을 나눈 비율로서 계산한 결과 민주당정부에서는 3.7% 감소하였지만, 반면에 공화당정부에서는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결론적으로 전체 기간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14년간의 민주당정부에서는 현저히 소득 하위 40%로 상위 20%의 세후소득을 나눈 비율이 낮아진 반면에 공화당정부에서는 큰 변화를 얻지는 못하였다. Hibbs and Dennis(1988)는 기간을 1948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연장시켜 분석하였다.

Bartels(2004)의 논문은 Hibbs and Dennis(1988)의 분석에서 기간 연장을 통하여 과거 50년간에 걸친 소득분포와 관련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논문은 1947년부터 2001년까지 소득분포별로 하위부터 상위로 20%, 40%, 60%, 80%, 95%의 세전 실질가계소득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실질가계소득은 연간기준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분석을 통하여 저소득계층과 중산층, 고소득계층의 실질가계소득 추이를 파악하였다. 이 분석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948년부터 2001년까지 소득분포별로 연간 실질소득증가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연간 실질소득증가율은 하위부터 상위로 나타날 때 20%에서 1.58%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95%에서는 이 보다 다소 높은 2.10%를 나타냈다. 이 기간동안 소득분포에서 하위에 가까웠던 계층의 실질소득증가율보다는 상위 소득계층의 실질소득증가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하위계층 실질소득의 경우 변동성(fluctuations)이 상위 소득계층보다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위 20%의 소득계층의 경우 실질소득으로 살펴본 결과 54년

기간동안 중에서 17년간의 기간이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에 상위 20%에서는 54년 기간동안 실질소득의 하락세를 경험한 기간이 11년으로 더 짧았다. 각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실질소득증가율의 효과는 1년의 시차가 있음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Christiano · Eichenbaum · Evans(1999), Perotti(2002)에서 나타났듯이 금융 및 재정정책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 정책효과에 따른 실증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정부에서는 저소득계층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증가율이 고소득계층보다 다소 높으며 소득불균형이 점차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당정부의 정당정책은 확장적인(expansionary) 거시경제정책이 주류를 이룬 반면에 공화당정부의 정당정책은 민주당정부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달리 긴축적인(contraction) 거시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집권시기별로 분석을 할 때 2차년도 들어 민주당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연평균 실질소득증가율이 4.5%에 달하였으나 공화당정부에서는 -1.2% 수준을 보였다.

민주당정부에서는 소득계층 하위 20%의 실질소득증가율이 연간 2.9% 이었으나 공화당정부에서는 0.1% 상승에 그쳤다. 이 분석에서 소득분포별 특징을 살펴보면 상위 5%의 경우 조사기간 전체에 걸쳐 별다른 변화가 없어 기간 간의 상관관계 즉, t 기 $t+1$ 기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으며 또한 정부 형태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한편 분석 기간 전체를 통하여 살펴보면 공화당정부 기간 동안에는 하위 20%의 연간 실질소득증가율이 0.6%에 그친 데 비하여 상위 5%의 소득증가율은 2.09%에 달하여 이들 계층 간의 소득증가율 격차가 1.5%p 정도에 이르렀다. 반면에 민주당정부 기간 동안에는 하위 20%의 연간 실질소득증가율이 2.63%나 되었고 상위 5%의 소득증가율은 이보다 다소 낮은 2.11%를 기록하였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미국 경제의 변화에 따라 상위 5%의 경우 정부 간에 큰 차이가 없이 높은 실질소득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Hibbs(1987)는 1953년부터 1983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민주당정부의 경우 공화당정부에 비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수하고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 의하면 민주당정부의 실업률이 공화당정부에 비하여 2%p 감소하였으며 실질 GDP성장률은 민주당정부에서 공화당정부에 비하여 6% 정도 높았음을 증명하였다.

Bartels(2004)는 54년의 기간 동안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연평균 실업률,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을, 그리고 1년 동안의 정책 시차를 반영한 변수들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결과는 Hibbs(1987)와 같이 민주당정부에서 공화당정부에 비해 실업률이 낮고 GDP성장률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인플레이션율은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Danziger and Gottschalk(1995)는 공화당정부에 비하여 민주당정부에서 조세인하 정책으로 인하여 계층 간의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Bartels(2004)에서 공화당정부에서 연간 실질소득증가율은 선거가 있는 시기와 선거가 없는 시기와 관계없이 비슷한 추세를 나타냈다. 선거가 있는 시기에 소득순위 상위 5%의 고소득계층의 연간 실질소득증가율은 하위 20%에 비하여 1.5%p 상회하였다. 한편 모든 계층의 연평균 실질소득증가율을 살펴보면 선거가 있는 시기가 선거가 없는

시기보다 2%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화당정부의 경우 선거가 있는 시기에 더 집권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민주당정부의 경우에는 선거가 있는 시기의 연간 실질소득증가율이 선거가 없는 시기보다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소득 계층들로 살펴보면 소득순위 상위 5%의 고소득계층의 경우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연간 실질소득증가율이 하락하였으며 모든 계층을 포함하면 선거가 있는 시기가 선거가 없는 시기보다 1%p 하락하였다. 소득순위 하위 20%의 경우 선거가 있는 시기의 연간 실질소득증가율에서 공화당정부가 2.1%로 민주당정부 1.0%에 비하여 두 배를 나타내며 1.0%p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통계학자들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시기의 실질소득이 증가할 경우 집권정부에 대한 투표 성향이 2~2.5%p 정도 늘어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따라서 선거가 있는 시기와 전체 기간(선거가 있는 시기와 선거가 없는 시기 포함)을 비교할 때 만일 평균 1.6%p 차이가 난다면 3~4%p 정도 예상투표를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이 논문에서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부시행정부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와 같이 소득불균형이 심하지는 않지만 다소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1970년과 2000년을 비교할 때 소득순위 하위 20%로 나눈 상위 20%의 실질소득의 비율은 25.5%까지의 증가하였다.

3. 보수정부와 진보정부별 소득 분석

3.1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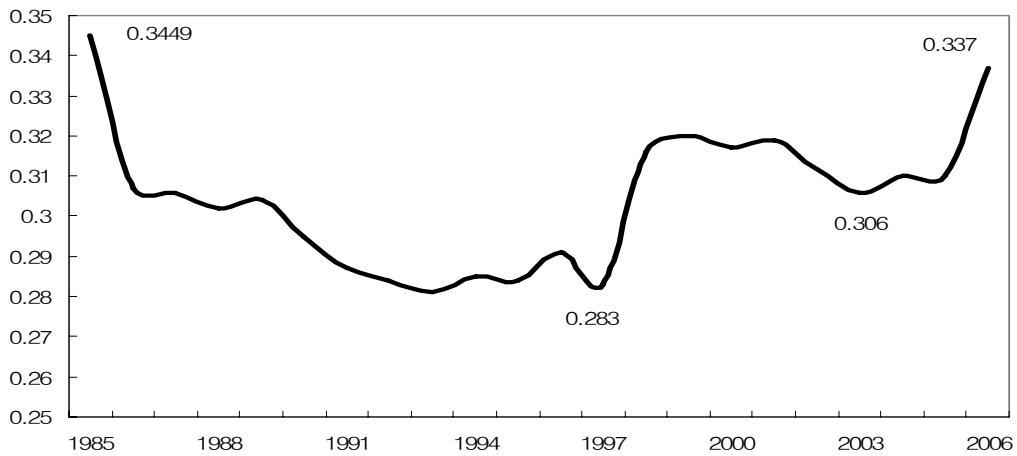
기초통계량에서 사용되는 각종 자료들은 1980년 3/4분기부터 2007년 3/4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집권정당은 전두환 대통령정부(1980년 9월~1988년 2월), 노태우대통령정부(1988년 2월~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정부(1993년 2월~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정부(1998년 2월~2003년 2월), 노무현대통령정부(2003년 2월~2006년 12월)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따라 보수정부(전두환 대통령정부~김영삼 대통령정부)와 개혁정부(김대중 대통령정부~노무현대통령정부)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총통화증가율과 조세부담률, 통계청 KOSIS을 통하여 10분위 근로자소득, 지니계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각각의 변수들은 물가상승률을 차감하여 실질화하였다.

3.2 정부별 지니계수 동향분석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통하여 살펴보면, 지니계수가 보수정부인 전두환 대통령정부의 1985년 0.3449에서부터 외환위기 시점인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283까지 기록하였다. 이후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진보정부인 김대중 대통령정부에는 지니계수가 증가하였고 노무현대통령정부 시점인 2003년에 0.306으로까지 감소한 후 2006년까지 0.337로 다시 증가하였다.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1> 지니계수 동향

3.3 정부별 소득비중 변화

한국 가계의 상위 10%의 근로자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보수정부인 전두환 대통령정부 집권기인 1982년 1/4분기 들어 25.48%나 차지하던 것이 소득 집중도가 점차 완화되면서 노태우대통령정부 집권 초기인 1988년 1/4분기에는 23.96%까지 낮아졌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정부 집권초기인 1993년 1/4분기 들어 23.11%까지 소득집중도가 완화되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과정을 겪으면서 진보정부를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정부 집권초기인 1998년 1/4분기 들어 24.42%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노무현대통령정부 집권초기인 2003년 1/4분기 들어 24.79%까지 다시 상위 10%의 근로자소득 집중도가 심화되었다. 이후 2007년 3/4분기 들어서는 한국 가계의 상위 10%의 근로자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75%를 나타내어 소득집중도가 외환위기 이전수준으로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 정부별 상위 10%의 근로자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정부별	상위 10%의 근로자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점	비중 (%)
전두환대통령정부	1982년 1/4분기	25.48
노태우대통령정부	1988년 1/4분기	23.96
김영삼대통령정부	1993년 1/4분기	23.11
김대중대통령정부	1998년 1/4분기	24.42
노무현대통령정부	2003년 1/4분기	24.79
	2007년 3/4분기	23.75

자료 : 통계청, KOSIS

소득별로 하위 20%의 근로자소득으로 상위 20%의 근로자소득을 나눈 비율로 측정
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불균형(inequality)이 보수정부 내에서 전두환대통령정부부터 김
영삼대통령정부까지 완화되면서 상위 20%의 근로자소득과 하위 20%의 근로자소득의
차이가 3배 이내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집권한 김
대중대통령정부 초기에서부터는 다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노무현대통령
정부에 들어서면서 가장 극심해져 사회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

<표 2> 하위 20%의 소득으로 상위 20%의 근로자소득을 나눈 비율

정부별	하위 20%의 소득으로 상위 20%의 근로자소득을 나눈 비율	
	시점	비중 (%)
전두환대통령정부	1982년 1/4분기	3.20
노태우대통령정부	1988년 1/4분기	3.12
김영삼대통령정부	1993년 1/4분기	2.87
김대중대통령정부	1998년 1/4분기	3.23
노무현대통령정부	2003년 1/4분기	3.22
	2007년 3/4분기	3.37

자료 : 통계청, KOSIS

1982년부터 2007년3/4분기까지의 근로자소득 10분위별 실질소득증가율을 분석하였
다. 여기서 실질가계소득은 연간기준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분석을 통하여 저소득계
층과 중산층, 고소득계층의 실질근로자소득 동향을 파악하였다. 먼저 평균과 표준편차
를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각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실질소득증가율의 효과는 1년의 시차
가 있음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보수정부인 전두환 대통령정
부부터 김영삼 대통령정부까지 모든 분위에서 평균적으로 근로자소득증가율이 감소하
였으며, 특히 김영삼 대통령정부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로 1분위와 2분위는 음(-)의 증
가율을 기록하였다. 외환위기 여파와 경제성장률 하락 등에 영향을 받아 김대중 대통
령정부부터 노무현대통령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진보정부의 기간 동안에는 이전의 보

1) Bartels(2004)는 미국의 소득분포가 공화당정부와 민주당정부의 정책 차이점에 따라 과거 50년 동안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정부 기간 동안의 소득증가율은 고소득계층보다 저소득계층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공화당정부 기간 동안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소득별로 하위 20%의 소
득으로 상위 20%의 소득을 나눈 비율로 측정된 결과에 따르면 소득불균형(inequality)이 민주당정부
기간동안인 과거 30년 간 완화되었다. 반면에 공화당정부 기간 동안에는 이 수치가 80% 이상 증가하
여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대 후반까지를 살펴보면 하위 20%의 소득에 비해 상위 20%가 3배 이상의 소득을 올렸으며 소득
불균형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소득불균형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 확
대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서는 그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소득계층에 따른 소득불균형 심화
현상은 장기적인 기술 및 사회 변화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정부와 공화당정부의 차이점은 소득
계층 간의 소득불균형이 민주당정부에서는 줄어들고 공화당정부에서는 확대된 점이다. 하위 20%의 소
득으로 상위 20%의 소득을 나눈 비율로 측정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두 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아
이젠하워, 닉스, 포드, 레이건, 부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공화당정부 기간동안 확대되었으며 카터 대통
령 집권 시기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정부 기간 동안에는 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수정부에 비하여 현저히 근로자소득증가율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진보정부 기간 동안에는 저소득계층보다는 고소득계층에서 평균적으로 실질근로자소득증가율이 더 높고 표준편차를 토대로 살펴보면 변동성도 작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 정부에 들어 1분위와 2분위의 경우 표준편차를 토대로 살펴보면 변동성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보수정부에서 비하여 오히려 진보정부에서 저소득계층의 실질근로자의 소득증가율이 더 낮고 변동성이 확대되어 불확실성(uncertainty)이 확대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하위 20%의 소득계층의 경우 실질소득으로 살펴본 결과 25년 기간 동안 중에서 14년간의 기간이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에 상위 20%에서는 25년 기간 동안 실질소득의 하락세를 경험한 기간이 15년으로 1년 더 많아 특별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하위 20%의 소득계층에서는 이 기간 동안 음(-)의 실질근로자소득증가율을 2년간 보였는데 이는 상위 20%와 동일한 결과이었다. 그리고 상위 20%에서는 0% 실질근로자소득증가율을 나타낸 기간이 1년을 차지하였다. 한편 한국 경제의 변화에 따라 상위 10%의 경우 실질근로자소득증가율에서 상대적으로 정부 간에 큰 차이가 없이 가장 변동 폭이 작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Bartels(2004)의 미국 경우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정부별 및 소득계층별 근로자소득 실질증가율(전년동기대비)
(단위 : %)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두환대 통령정부	10.73 (7.68)	10.23 (5.04)	10.05 (4.76)	9.76 (5.51)	10.03 (5.45)	10.14 (5.62)	10.26 (5.34)	10.26 (4.89)	10.77 (5.02)	10.95 (7.44)
노태우대 통령정부	10.99 (8.95)	10.92 (6.32)	11.17 (5.30)	11.18 (4.93)	10.89 (4.55)	10.60 (4.23)	10.18 (4.13)	10.07 (3.17)	9.27 (3.18)	8.14 (9.64)
김영삼대 통령정부	-1.21 (14.58)	-0.06 (11.39)	0.30 (10.35)	0.62 (9.87)	0.98 (9.54)	1.36 (9.03)	1.56 (9.18)	1.28 (9.16)	1.59 (8.78)	2.56 (9.14)
김대중대 통령정부	3.81 (7.08)	4.18 (3.40)	4.78 (3.07)	4.70 (2.45)	4.63 (2.12)	4.33 (1.98)	4.62 (2.58)	4.86 (2.91)	4.42 (2.83)	4.36 (8.55)
노무현대 통령정부	3.60 (12.38)	2.51 (5.04)	2.64 (3.62)	3.23 (2.88)	3.75 (2.67)	4.12 (1.82)	3.80 (2.41)	3.61 (2.93)	3.97 (3.18)	3.16 (1.97)

주 : 근로자소득증가율에서 물가상승률 제외한 근로자 실질증가율이며, ()는 표준편차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전두환 대통령정부부터 김영삼 대통령정부까지의 보수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정부부터 노무현대통령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진보정부를 살펴보면, 보수정부에서 통화 및 재정정책에 있어서 보다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수 정부에 있어서 GDP성장률이 더 높았으며 물가상승률도 높았다. 하지만 진보정부의 경

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취한 것도 한 원인일 수 있다.

<표 4> 정부별 거시경제변수 추이(평균)

구 분	통화증가율	GDP성장률	인플레이션율	조세부담률
전두환대통령정부	1.7	7.4	0.4	16.6
노태우대통령정부	1.3	8.4	0.5	17.1
김영삼대통령정부	1.1	7.1	0.4	17.9
김대중대통령정부	0.6	4.4	0.2	18.9
노무현대통령정부	0.3	4.3	0.2	20.3

주 : 통화증가율(M2말잔기준), GDP성장률은 물가상승률을 차감하여 모두 실질화하였다.

자료 : 한국은행 통계검색시스템, 통계청 KOSIS

4. 요약 및 결론

우리는 1980년 3/4분기부터 2007년 3/4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의 집권정당 정책과 소득분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집권정당은 전두환 대통령정부(1980년 9월~1988년 2월), 노태우대통령정부(1988년 2월~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정부(1993년 2월~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정부(1998년 2월~2003년 2월), 노무현대통령정부(2003년 2월~2006년 12월)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따라 보수정부(전두환 대통령정부~김영삼 대통령정부)와 개혁정부(김대중 대통령정부~노무현대통령정부)로 구분하였다.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통하여 살펴보면, 지니계수가 보수정부인 전두환 대통령정부의 1985년 0.3449에서부터 외환위기 시점인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283까지 기록하였다. 이후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진보정부인 김대중 대통령정부에는 지니계수가 증가하였고 노무현대통령정부 시점인 2003년에 0.306으로까지 감소한 후 2006년까지 0.337로 다시 증가하였다.

한국 가계의 상위 10%의 근로자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보수정부인 전두환 대통령정부 집권기인 1982년 1/4분기 들어 25.48%나 차지하던 것이 소득집중도가 점차 완화되면서 노태우대통령정부 집권 초기인 1988년 1/4분기에는 23.96%까지 낮아졌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정부 집권초기인 1993년 1/4분기 들어 23.11%까지 소득집중도가 완화되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과정을 겪으면서 진보정부를 살펴보면, 김대중 대통령정부 집권초기인 1998년 1/4분기 들어 24.42%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노무현대통령정부 집권초기인 2003년 1/4분기 들어 24.79%까지 다시 상위 10%의 근로자소득 집중도가 심화되었다. 이후 2007년 3/4분기 들어서는 한국 가계의 상위 10%의 근로자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75%를 나타내어 소득집중도가 외환위기 이전수준으로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별로 하위 20%의 근로자소득으로 상위 20%의 근로자소득을 나눈 비율로 측정

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불균형(inequality)이 보수정부 내에서 전두환 대통령정부부터 김영삼 대통령정부까지 완화되면서 상위 20%의 근로자소득과 하위 20%의 근로자소득의 차이가 3배 이내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정부 초기에서부터는 다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노무현대통령정부에 들어서면서 가장 극심해져 사회양극화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2년부터 2007년3/4분기까지의 근로자소득 10분위별 실질소득증가율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실질가계소득은 연간기준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분석을 통하여 저소득계층과 중산층, 고소득계층의 실질근로자소득 동향을 파악하였다. 먼저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각 정부의 정책에 따른 실질소득증가율의 효과는 1년의 시차가 있음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보수정부인 전두환 대통령정부부터 김영삼 대통령정부까지 모든 분위에서 평균적으로 근로자소득증가율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김영삼 대통령정부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로 1분위와 2분위는 음(-)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외환위기 여파와 경제성장률 하락 등에 영향을 받아 김대중 대통령정부부터 노무현대통령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진보정부의 기간 동안에는 이전의 보수정부에 비하여 현저히 근로자소득증가율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진보정부 기간 동안에는 저소득계층보다는 고소득계층에서 평균적으로 실질근로자소득증가율이 더 높고 표준편차를 토대로 살펴보면 변동성도 작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 정부에 들어 1분위와 2분위의 경우 표준편차를 토대로 살펴보면 변동성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보수정부에서 비하여 오히려 진보정부에서 저소득계층의 실질근로자의 소득증가율이 더 낮고 변동성이 확대되어 불확실성(uncertainty)이 확대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한국 경제의 변화에 따라 상위 10%의 경우 실질근로자소득증가율에서 상대적으로 정부 간에 큰 차이가 없이 가장 변동 폭이 작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Bartels(2004)의 미국 경우에서와 같이 저소득계층이 고소득계층 보다 거시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정부부터 김영삼 대통령정부까지의 보수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정부부터 노무현대통령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진보정부를 살펴보면, 보수정부에서 통화 및 재정정책에 있어서 보다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수정부에 있어서 GDP성장률이 더 높았으며 물가상승률도 높았다. 하지만 진보정부의 경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긴축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취한 것도 한 원인일 수 있다.

5. 참 고 문 헌

- [1] 이해영, 김종권, 2007, “한국의 집권정당별 거시변수 비교”, 대한경영학회
- [2] Alesina, Alberto, 1988, “Macroeconomics and Politic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Macroeconomic Annual, 11-55.
- [3] Alesina, Alberto, John Londregan, and Howard Rosenthal, 1993, “A Model of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 (1), 12-33.
- [4] Alesina, Alberto, and Howard Rosenthal, 1989, “Partisan Cycles in Congressional Elections and the Macroeconom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2), 373-398.
- [5] Alesina, Alberto, and Jeffrey Sachs, 1988, “Political Parties and the Business Cycle in the United States, 1948-1984,”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20 (1), 63-82.
- [6] Bartels, Larry M, 2004, “Partisan Politics and the U.S. Income Distribution,” Working Papers, 1-34.
- [7] Bartels, Larry M., and John Zaller, 2001, “Presidential Vote Models: A Recent,”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4 (1), 9-20.
- [8] Beck, Nathaniel, 1982, “Parties, Administrations, and American Macroeconomic Outcom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 (1), 83-93.
- [9] Blanchard, Oliver J., and Roberto Perotti, 2002, “An Empirical Characterization of the Dynamic Effects of Changes in Government Spending and Taxes on Outpu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 (4), 1329-1368.
- [10] Blank, Rebecca, and Alan Blinder, 1986, “Macroeconomics,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Sheldon Danziger and Daniel Weinberg, eds., *Fighting Poverty: What Works and What Does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11] Christiano, Lawrence J., Martin Eichenbaum, and Charles L. Evans, 1999, “Monetary Policy Shocks: What Have We Learned and to What End?” In John B. Taylor and Michael Woodford, eds., *Handbook of Macroeconomics*, vol. 1A, Amsterdam: North-Holland.
- [12] Cutler, David M., and Lawrence F. Katz, 1991, “Macroeconomic Performance and the Disadvantaged,”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74.
- [13] Danziger, Sheldon, and Peter Gottschalk, 1995, *America Unequal*,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and Harvard University Press.
- [14] Hibbs, Douglas A., Jr, 1977, “Political Parties and Macroeconomic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4), 1467-1487.
- [15] Hibbs, Douglas A., Jr, 1987, *The American Political Economy: Macroeconomics and Electoral Politic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16] Hibbs, Douglas A., Jr., and Christopher Dennis, 1988, “Income Distribution in

-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 (2), 467-490.
- [17] Hines, James R., Jr., Hilary Hoynes, and Alan B. Krueger, 2001, "Another Look at Whether a Rising Tide Lifts All Boats," Working Paper #454, Industrial Relations Section, Princeton University.
- [18] Jose, Tavares and Valkanov, Rossen (2003), "Fiscal Policy and Asset Returns", Working Papers, 1-34.
- [19] Keech, William R., 1980, "Elections and Macroeconomic Policy Optim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4 (2), 345-367.
- [20] Kramer, Gerald H, 1971, "Short-Term Fluctuations in U.S. Voting Behavior, 1896-1964,"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 131-143.
- [21] Levy, Frank, and Richard J. Murnane, 1992, "U.S. Earnings Levels and Earnings Inequality: A Review of Recent Trends and Proposed Explanation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0 (3), 1333-1381.
- [22] Mishel, Lawrence, Jared Bernstein, and Heather Boushey, 2002, *The State of Working America 2002/2003*, Ithaca, NY: ILR Press.
- [23] Patelis, A.D., (1997), "Stock Return Predictability and the Role of Monetary Policy", *Journal of Finance*, 52(5), 1951-1972.
- [24] Phillips, Kevin, 1990, *The Politics of Rich and Poor: Wealth and the American Electorate in the Reagan Aftermath*, New York: Random House.
- [25] Tufte, Edward R, 1978, *Political Control of the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6] Zellner, Arnold, 1962, "An Efficient Method of Estimating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 and Tests for Aggregation Bia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7, 348-368.